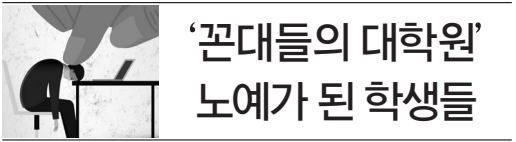


교수 말 잘 들어야 졸업...갑질에도 말 못하는 ‘을의 비애’



‘꼰대들의 대학원’
노예가 된 학생들

<1> 교수에게 절대 굴종

대학원생들 ‘노예’라며 비하하는 것이 일상이 돼 버린 세상이다. 버겁기만 한 업무에다, ‘철순잔치 준비’ 등 잡일까지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온갖 ‘갑질’을 당하면서 일하는데도, 노동자로 인정해주지 않는 게 현실이다.

최근에도 전남대 대학원생이 지도교수들에게 당한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목숨을 끊었다.

대학 스스로도 ‘전남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문제라며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원생 대상 갑질 근절 대책을 기대하는 건 무리일 지 모른다. 대학원생들이 연구자, 학자로서, 노동자로서, 인간으로서도 존중받지 못하는 실태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가. 그들의 고민과 아픔과 해결책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논문 심사·사례비 제공 문화 만연
“지도교수, 봉건제 영주 같은 권력”
주말도 없이 일하고 논문대필 강요
“죄인처럼 지내야 졸업한다” 한탄
갑질 피해 호소하며 목숨 끊기도

대학원생들 사이에서는 “죄인처럼 지내야 졸업한다”는 말이 상식처럼 통용되고 있다.

대학원생은 마치 죄인처럼 지도교수에게 복종하고, 교수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교수에게 금품을 상납하거나 주말도 없이 과로하고, 논문 대필 요구를 받거나 인격 모독 발언 등을 듣는 사례가 반복되면서도 저항조차 못 하고 있다고 한다.

교수에게 잘 보이기 위해 관행적으로 논문 심사

비, 사례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문화가 만연해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 조선대 미대 대학원을 졸업한 A씨는 “논문 심사 3회를 할 때마다 교수에게 식사를 대접해야 하고, 석사생은 30만 원, 박사생은 50만 원을 사례비로 건네야 했다”며 “교수에게 경사가 있다면 선물을 챙기거나 식사 대접도 해야 했다”는 대학원생들도 많다”고 말했다.

호남대 간호학과를 졸업한 대학원생 B씨도 “논문 심사를 받을 때 사례비 명목으로 10~30만원을 건네야 한다. 교수가 별활을 하지 않아도 학생들끼리 얼마를 전달할지 금액을 맞추는 일도 비밀비제 하”고 했다.

광주·전남지역 대학교에서도 교수의 갑질 행태는 흔한 사건이 된 지 오래다. 광주교대 교수 C씨는 지난달 1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지난 2020년 대학원생들에게 논문을 대필해 주겠다고 심사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아챙겼다. 석사학위 논문

심사 신청자 8명에게 심사비 명목으로 48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제자의 논문을 표절하는 교수들도 적지 않다. 이재명 정부 당시 교육부장관 후보자였던 이진숙 후보자조차 과거 교수 시절 작성한 다수 논문이 제자 논문을 표절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대학원생 인권은 무시되고 있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이 실시한 ‘2025 대학원생 실태조사’ 결과, 대학원생들은 지도교수가 학생 연구실에 CCTV를 설치해 감시를 하거나 연구비와 학생 인건비 전용 강요·미지급, 지도교수의 언어적 폭력 행사, 논문이나 학과과정 이행 여부와 관계 없는 유급 등 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갑질을 당해도 뿌리치고 나오기도 쉽지 않다. 대학원 학비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이미 들인 기회비용으로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다른 학교로 옮겨 새로 학위 과정을 밟기에는 기존에 따 놓은 학점 이관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새로 시작해야 하는 부담도 있기 때문이다. 인지도 높은 지도교수의 인맥으로 소문이 나거나 다른 교수들에게까지 밟힐 수

있어 내부고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준영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장은 이를 두고 지도교수가 대학원생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것이냐 따졌다고 설명한다. 대학원생들에게 지도교수란, 아무리 말도 안 되는 것을 저질러도 아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봉건제 영주’와도 같은 권력자라는 것이다.

또 낮은 취업률도 교수 갑질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다.

이공계 등은 대부분의 기업·기관이 최소 석사 이상이 기본 자원 자격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연봉 차이도 큰 상황이다.

2017년부터 ‘김박사넷’ 사이트를 만들어 대학원생들에게 대학원 정보를 전해 온 유일혁 대표는 “학생이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 외국은 지도교수와 맞지 않는다면 지도교수를 바꾸는 게 좀 더 쉽지만 우리나라는 학교 자체에서도 해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학교 구조상 학교보다 교수 힘이 센 곳도 있어서 교수 정계도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전남대 최근 5년간 성비위 사건 10건

교수·조교수 강제추행 최대
목포대 7건·순천대 2건 순

최근 5년간 광주·전남 국립대에서 20건의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에서는 모두 10건의 성비위 사건이 발생, 가장 많았다.

13일 조국혁신당 강경숙(비례) 의원이 전국 39개 국립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년 8월) 광주·전남 국립대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은 모두 20건으로 집계됐다.

전남대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목포대 7건·순천대 2건·목포해양대 1건 등의 순이었다.

전남대의 경우 교수·조교수에 의한 강제추행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직 공무원(행정서기보)의 불법촬영, 학생들의 음란행위·성

적 영상 유포 등도 발생했다. 전남대 성비위 관련자들은 모두 해임이나 무기정학 처분됐다.

목포대에서는 학생에 의한 성추행·성희롱·불법 촬영이 6건, 교수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1건이 발생해 제직·해임·출교 처분됐다.

순천대는 학생에 의한 인권침해와 불법 촬영 등 2건이었고 목포해양대는 교직원에 의한 불법 촬영 및 협박 등 1건이다. 순천대는 학생들에게 무기정학 3~6개월 이상을, 목포해양대는 해당 직원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같은 기간 전국 국립대 교직원과 학생의 성비위 징계 건수는 161건으로, 서울대가 18건, 전북대 16건, 경상대 16건, 강원대 12건 순으로 많았다.

강 의원은 “국립대는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지닌 곳인 교육기관으로 더 높은 윤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기후·생태 놀이 즐거워요

14일 오전 광주시 북구 충효동 광주호수생태원에서 열린 ‘유아 기후·생태 놀이교실’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나뭇가지를 입에 물고 식물의 영양분 이동 원리를 배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지역 중견건설업체 유탑그룹 계열사들 잇따라 법정관리

광주·전남지역 중견건설업체 유탑그룹 계열사들이 잇따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지난 13일 유탑그룹 계열사인 유탑디앤씨, 유탑건설, 유탑엔지니어링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법인 회생 절차 과정에서 채권자들이 채무자인 각 업체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하는 조치다.

유탑그룹은 광주시 서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국에 주택·호텔·리조트 등을 건설해 온 그룹이다.

유탑건설은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순위 97위에 오른 업체이며, 유탑엔지니어링은 중견 설계·감리업체로 광주시청·전남도청 청사와 광주 월드컵경기장,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설계·감리를 맡은 바 있다.

유탑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다음 심문 기일은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김대중 전남교육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입건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과거 납품 비리를 저지른 업체의 가족 소유 주택에 시세보다 낮은 월세를 내고 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은 김 교육감을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 교육감이 과거 전남도교

육청 납품 비리에 연루됐던 업자 A씨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월세 계약을 맺고 거주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이어 왔다. A씨는 과거 ‘암막 스크린 납품 비리’ 사건에 연루돼 위죄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23년 전남도교육청 인근인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의 한 한옥주택에서 월세 계약을 맺고 거주해 왔다.

한옥 집은 대지면적 381.60㎡, 주택 면적 120.15㎡ 규모로, 김 교육감은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05만원에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다른 아파트로 이사했다.

경찰은 김 교육감을 불구속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